

Online Series

2020. 01. 14. | CO 20-02

미국-이란 충돌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서보혁(평화연구실장)

김유철(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2020년 새해 벽두에 발생한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중동 질서와 핵비확산체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게는 경제적 이익과 파병문제는 물론 외교안보정책 결정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핵능력 고도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을 것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군지도자를 제거하던 즈음에 북미대화에 희망을 건다고 말했지만, 북한으로서는 작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미군의 군사작전이 준 충격이 겹쳐 '핵 포기 대 제재 완화' 수준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한국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함에 있어 미국-이란 충돌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미국-이란 충돌의 결과 개괄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중동은 물론 세계정세가 어렵게 출발하였다.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은 중단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고, 양국 간 충돌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이란의 이번 충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정권이 손해 볼 것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란 정권은 최고위급 군 지도자가 사망했지만 핵개발 재개를 선언하는 명분을 얻었고 아랍 세계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높였을 수 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더 강력한 제재와 민간항공기 격추에 대한 국내외의 비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미국은 정확하고 기민한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첨단 군사력을 이용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과시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군사작전으로 정국을 주도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다.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균열은 미국의 슬레이마니 제거에 따른 가장 큰 부작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맺은 다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서 탈퇴하였다. 그러자 이란은 핵 합의 이행을 축소하고 우라늄 농축을 재개해오다가, 이번 충돌로 핵 합의 이행 중단을 공식 선언하였다. 북한도 미국의 북핵정책을 비판하며 핵개발 지속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발효 5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 세계는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에 직면하게 되었다.

2.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미국-이란 충돌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복합적이다. 먼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산유국들로부터 대부분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경제적 국익 증진에 관건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파병 요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부가 미국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고 중동 현지 파병부대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또한 한국은 미국-이란 충돌 이후 한반도 정세 관리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조체제의 강화 필요성을 갖게 된다. 2000년대 들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군사는 물론 경제 및 가치 영역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한 바 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 권역을 벗어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 평화를 중심으로 양국의 호혜적 이익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결합시키는 ‘평화동맹’의 패러다임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안보정책 영역과 행위자 등에서 상호연계성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합외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더욱 복잡하다. 미국의 정확하고 기민한 군사행동은 김정은 정권에게 강한 경고를 주었을 것이다. 북한도 이란처럼 계산되고 제한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으나 그 부작용이 막대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감안할 때 북한이 먼저 도발할 가능성은

났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과 유사하게, 이란이 기존의 다자 비핵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재개하여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현실에 주목할 것이다. 북한과 이란은 기존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체제와 국제제재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점은 한국과 미국의 북핵정책에 새로운 도전 요소가 될 것이다.

미국의 높은 군사기술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지속, 김정은과 트럼프의 개인적 '친분' 등이 함께 작용할 경우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년 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면서도 미국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올 초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에 거는 희망을 피력했다. 비핵·평화에 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지만, 이번 중동사태를 계기로 향후 본격 협상을 위한 실무접촉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1월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 접수를 확인하면서 미국에 '공정한' 협상을 촉구했다. 김 고문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완전한 보상을 미국이 갖고 나오라는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와 같은 '완전 핵 포기 대 제재 완화'와 같은 협상에는 결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이번 충돌이 남북관계에 주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이란 충돌이 북한의 안보위협을 가중시켜 핵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할 경우, 대이란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음은 물론 북한에게 대남 비난의 명분을 높여줄 수 있다. 작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미추종', '외세의존'이라 비난해왔다. 지난 1월 7일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안과 이후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은 북미 협상의 중재 역할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대남 비난을 볼 때 남북대화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이는데, 파병 시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명분을 추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실익을 기대한다면 파병에 대한 비난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작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북한은 "조미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 있다"고 보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즐기치게 진행해나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행보, 특히 대북 제안은 실현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고, 대미 협력은 물밑 아래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민간교류는 장려함으로써 남북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평화 협상에 주는 시사점은 유동적이다. 미국-이란 충돌 이후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를 받으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과 이란의 행보를 지켜보게 되었다. 시아파 민병대들의 미군 공격 가능성과 민간항공기 격추의 여파 등으로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의 추가 대이란 제재도 진행될 것이므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은 당분간 이란문제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면돌파’를 내세운 북한의 입장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는 미국이 먼저 움직여야 대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서외교가 가동돼 다시 한번 탑-다운식 대화가 추진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이 ‘정면돌파’의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대화의 열쇠는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도 변수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 대 완전한 상응조치의 틀에서 고위급회담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현 교착상태를 관리하며 대선 가도로 나아갈 것이냐의 최종 판단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으로서는 두 가능성에 모두 대응해야 할 것이다.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